

[규제개혁 인식 전환]

- 규제개혁은 경제생산성 향상, 산업·기술융합, 서비스산업 발전, 경제적지대행위 축소 등과 연관된 경제혁신의 핵심요소
- 중소기업 보호·지역균형발전 등 타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와의 상충은 규제 개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 규제는 특정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 도입되는 점을 감안, 규제가 필요한가가 아닌 '목적 달성에 적합한가'로 규제를 평가
- 사회적 규제도 경제활동과 연관되어 규제비용이 소요되므로 경제적 규제와 함께 비용, 편익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필요
- 규제는 특정계층에 대한 특권과 비리의 소지가 있는 '완장'
→ 규제개혁은 완장을 제거하여 국민·기업이 스스로의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제한을 지키도록 만드는 것

[개혁 추진방안 : 포괄적·지속적인 시스템적 개혁]

- (강력한 개혁) 부처별 단기('14.12월) 감축목표 설정, 당정협의를 통한 규제 일괄정비 등 정부 주도의 강력한 개혁 실시
- (규제평가 내실화) 규제영향분석에 KDI 등 전문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규제비용의 객관적 추계·분석이 가능한 체계 구축
- (글로벌스탠더드 활용) 금융, 보건 등 각 분야의 국제기준을 한국의 준수가능성 등을 고려해 규제도입의 준거로 활용
- (의원입법 사전검증) 현재 사전검토 절차가 면제되는 의원발의 입법에 대해 규제영향평가, 심사 등 객관적 검증절차 도입
- (지자체 규제개선) 체계적인 실태조사, 감사원 등 모니터링 확대를 통해 자의적 입법·집행 행위 개선
- (정부분야 혁신) '규제→민간활동 조장(encourage)'으로 규제생성 주체인 정부의 정책방향과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전환

- 김태윤 한양대 교수

우리 경제와 사회 상황은 범상한 선진국의 정책 경험이나 시행착오를 안일하게 답습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 서민들의 생활은 너무나 강박하고 아무런 타개책이 보이지 않는 상태이다. 특히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완전히 고갈되어, 훈련받고 현명한 미래 세대를 전혀 양육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사소한 정책적 전환 앞에서도 이념을 앞세운 진영논리에 갇혀 소중한 사회적 자원을 소진시키고 있다. 이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첫째, 수도권 규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완전히 다른 정책 조합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우리나라 수도권은 상해, 런던, 뉴욕과 일대일로 경쟁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진 거의 유일무이한 자산의 집적체이다. 한가한 근대적 도시이론이나 망국적 나눠먹기로 소진할 여유가 없다. 균형발전을 유지하면서 수도권의 활력을 배가할 수 있도록 회사별로, 공장별로, 지역별로 특색이 있는 영민한 정책 아이디어와 끈덕진 대국민 설득을 추진한다면 성공가능성이 있다.

둘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적인 노동 유연성을 지향하는 일련의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청년을 지금 고용하여 적절히 훈련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 생계가 위협받는다. 과감하게 이야기하면, 청년의 경우에는 보다 쉽게 고용하고 쉽게 해고 할 수 있는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는 한편 해고된 인력을 훈련하고 보상하는 복지 네트워크가 병존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 보호규제를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사람과 중소기업에 취업해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중소기업 사장님을 보호하는 현행의 규제로는 결코 미래가 없다.

넷째, 규제개혁 제도의 차원에서는 규제총량 관리제도를 시급히 도입하여, 규제의 총수를 관리하고 국가의 간섭인 규제의 강도를 완화시키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규제대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노력을 안정적이며 체계적인 방식으로 수행해야 한다. 또한 규제일몰제 및 규제개별구제와 규제특례제도 등도 과감하게 도입 내지는 적용해야 한다.

자치법규(광역·기초)의 경쟁제한성을 분석한 결과 전체 경향성은 직접적인 진입규제, 가격규제 등은 거의 없었고, **간접적 경쟁제한 규제**(인증, 진흥, 지원 관련)는 매우 많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간접적 경쟁제한 규제는 모두 WTO, FTA 규정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며 그 외 규제검토에서 모범사례도 몇몇 발견하였다.

직접적인 경쟁제한 규제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으나 여전히 지역건설산업 규제, 상생협력 규제, 유통산업합리화 법에 의한 규제 등이 발견된다. 간접적 방식의 경쟁제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그 수가 매우 많으며 경제민주화와 녹색성장, 지역발전 등의 새로운 의제(Agenda)로 인해 증가하였다.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의 개선방안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는데 먼저 **내용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자치법규의 내용이 경쟁제한성을 고려해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시장에 특정한 몇몇 대상자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경쟁의 위치를 보장해 주는 진입규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선결적으로 해소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또한 가격규제와 사업활동규제와 같이 사업자의 시장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들은 그것이 불합리하게 시장에서의 특정한 사업자에 과도한 비용을 유발시킬 경우 반드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정사업자를 지원이 가능한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매우 포괄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가 두드러진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지원대상자 선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절차를 반드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런 자치법규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그것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개선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의 생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낮은 입법전문성을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의 합리성에 대한 주기적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개선을 시킬 수 있는 정착된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 윤창현 금융연구원장

국내 금융회사는 저금리, 저성장, 규제비용 증가, 소비자 신뢰 추락 등으로 인해 경영난에 봉착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 및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한 규제완화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부수업무의 포괄주의(negative system) 전환, 은행 계좌이동제 등 **영업 및 시장규제 완화**, **금융사의 인가단위 단순화**, **펀드슈퍼마켓 도입 등 진입규제 완화**, **구두지도, 불명확한 관행 등 숨은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외환위기, 카드대란,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서 보듯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금융업의 경쟁력 제고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일부 규제 강화도 필요하다**. 가령 금융사의 건전성 규제,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규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규제는 더욱 엄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나아가 국내 금융회사는 각종 금융사고 등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므로 **서민금융 활성화, 신용평가 인프라 정비 등의 따뜻한 금융을 통해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

- 김문겸 중소기업 ombudsman

- 규제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선 체감도는 여전히 미흡
 - 고질규제 신속개선, 규제관리(개선) 시스템의 내실 있는 운영, 규제수준에 대한 공감대 형성 미흡 및 이행 지연 등이 그 원인
 - 또한 중소기업은 획일적인 규제, 투입방식의 규제, 공평하지 못한 규제에 대해 높은 불만
- 규제혁파를 통한 기업활동 정상화를 위해 규제 썬크탱크 설치·운영 및 중앙부처 기업활력지수 측정 및 공표를 2대 추진전략으로 제안
 - 아울러 규제 정상화, 비용 감축, 순응 제고, 시간 단축을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4대 중점과제로 선정할 필요

* (규제정상화) 공공부문 직접조달/법정사무 수탁기관, (비용감축) 산업단지 입주기업 / 창업·성장 장벽규제(순응제고) 업종별 핵심규제 / 소기업·고용창출기업, (시간단축) 규제개선 일괄개정 / 자동허가·승인제

우리나라의 에너지 네트워크 산업은 심각한 진입규제, 가격규제 및 경영규제 하에 놓여 있다. 전력의 발전부문에서는 한전의 발전자회사가 88%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고 송전·배전·판매사업을 한전이 독점하고 있어 사실상 수직적 독점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셈이다. 가스의 경우 일부 자가용가스의 도입을 제외하고는 가스공사가 가스의 도입·인수·저장·수송·판매의 전 도매과정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전력과 가스에 있어서 한전과 가스공사는 땅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을 통하여 그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자의적이고 원칙 없는 가격규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수급불안과 적자 및 부채 또는 미수금 증가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간, 연료간, 지역간 교차보조를 시행하고 있어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적정 자원배분을 제약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상장 공기업인 한전과 가스공사에 대한 심각한 경영규제는 경영의 자율성과 연속성·일관성·책임성을 훼손하여 장기적인 수익성보다는 단기적인 투입의 정당화에 매달리게 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이들 공기업의 유상증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부채에 의한 투자자원 조달에만 매달리고 있어 재무지표와 부채비율이 악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전력과 가스산업에 경쟁을 도입하고 제3자에 의한 땅의 사용을 자유롭게 하여 경쟁자의 진입 후에도 배타적인 땅사용의 관행이 경쟁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독립적 규제기관을 설립하여 공공요금에 정치적인 압력에 의하여 왜곡되지 않도록 하며 교차보조를 개선하고 지역 시그널을 반영하여 가격 시그널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미 상장되어 여타 공기업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소유구조를 갖는 에너지 공기업에게 자유로운 경영을 허용하여 자율과 경쟁 속에 경쟁력을 꽃피울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ICT 산업은 스마트폰 등장 이후 융합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에 놓여있다. 휴대폰, PC, TV 등 모든 기기가 통합되고, 네트워크 또한 유/무선, 방송/통신의 구분이 없어지고 있다. 좋은 콘텐츠는 국경과 기기, 네트워크의 경계를 넘나들며 세계인들을 사로잡는다. 급격한 융합 추세에서 살아남기 위해 ICT 기업들은 합종연횡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쟁구도 또한 요동치고 있다. 한편, ICT 산업은 다른 산업의 융합에 촉매제로 작용하면서 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산업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가전제품, 자동차, 항공기, 로봇 등에 컴퓨팅 및 통신 기능이 결합하면서 ‘스마트 기기’로 거듭나고 있다. 메르세데스 벤츠 디터 제체 회장의 “자동차는 이제 가솔린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움직인다.”라는 말은 이런 상황을 잘 함축하고 있다. 의료, 교육, 유통 등 서비스 산업에서도 ICT는 혁신의 핵심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ICT 산업을 둘러싼 생태계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지만, 우리의 규제제도는 새로운 변화를 담아내는 데 매우 더딘 편이다. 하지만 규제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나라 ICT 산업의 경쟁력 확대, ICT 산업의 활용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은 불가능하고, 외국과의 경쟁에서 낙오하고 말 것이다.

정부는 1990년 이래 꾸준히 ICT 산업에서 경쟁을 확대해왔다. 그러나 이에 발맞춰 시장기능을 확대하고 정부개입을 줄여나가려는 노력은 매우 미흡했다. 여전히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려면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하고, 강력한 요금 및 마케팅 규제가 경쟁을 가로막고 있다. 이제 정부는 ICT 전반에 걸친 규제 개혁을 통해, 융합을 촉진하고 네트워크, 플랫폼, 콘텐츠 등 ICT 생태계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대표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제시하면, (1) **요금경쟁을 저해하고 있는 통신사업자에 대한 요금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2) 요금경쟁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보조금이 유일한 경쟁수단이 되고 있는데, 정부의 보조금 규제는 보조금 경쟁을 약화시키거나 이용자 차별을 줄이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더 강력한 규제는 규제집행 비용 증가에 비해, 불법 보조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범법자”만을 양산할 것이다. 따라서 **요금**

및 보조금 규제를 동시에 폐지하고 담합을 감시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해야 한다. (3) 기존 네트워크/주파수/산업 구분을 기초로 하고 있는 현재의 진입규제 틀을 허물고 “통합 방송통신사업법”을 제정함으로써 융합과 신규 서비스의 출현을 촉진해야 한다. (4)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을 조속히 실현함으로써 네트워크와 플랫폼/콘텐츠 기업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 이용량에 비례한 요금제 도입을 통해 이용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통신사업자의 적정한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ICT와 타 산업의 융합을 가로막는 요인들은 기술부족, 수요기업-ICT 기업 간 갈등, 수익모델 부재, 초기 수요 부족 등 다양하다. 그러나 그 중 각 부처의 칸막이식 법·제도 개선이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이다. “ICT 융합”은 기존 산업 경계를 초월하여 이루어지는데, 정책은 각 산업별로 수립, 집행되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 교육 등 서비스 산업에서 규제 개혁과 함께 공공수요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등이 패키지로 이루어지면, 신산업 창출, 고용확대 및 서비스 산업 글로벌 진출이 가능할 것이다.

1865년 영국은 “적기조례”를 제정하여 자동차 앞에 붉은 깃발을 든 사람을 배치하고 시내에서는 시속 2마일 이하로만 운행하도록 했다. 행인을 보호하고, 마차와의 충돌사고를 막겠다는 좋은 의도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산업의 진화 추세에 거스른 엉뚱한 규제의 대명사가 되었다. 우리 주변의 “적기조례”들을 폐지할 때 ICT 산업과 다른 산업의 융합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I. 규제개혁과 개혁 시스템에 대한 평가

-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은 1998년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에 의해 행정부의 상설 기능으로 자리 잡았고, 시스템에 의한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제도화에 성공한 개혁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노무현 정부 이후 규제개혁의 추진력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이 현저하게 약화됨. 문제는 시스템이 아니라, 부실한 제도운영
- 규제개혁 추진에도 체감도가 낮다거나, 기업환경이 여전히 열악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항구적인 시스템 개혁이 아닌 임시 중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총량규제에 초점을 맞춘 일과성 규제개혁을 했기 때문.

II. 규제개혁 강화 방안

1. 규제개혁의 초점을 규제 총량이 아니라 규제의 품질에 맞춰야

- 국민이 규제로부터 받는 고통은 규제총량이 아니라 하나의 규제이고 그 규제가 초래하는 정신적 경제적 부담에 비례함. 따라서 규제개혁 초점을 숫자 축소가 아니라 규제 수단의 적정성과 규제 집행과정의 합리성에 맞춰야 함.

2. 현존하는 규제에 대한 일제 정비: 규제 STOCK 관리

- 금년 말까지 시한을 정하여 모든 등록규제에 대해 집행부서로 하여금 규제의 필요성과 수단의 적정성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가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하는 소위 "규제 Guillotine" 실시.

3. 신설 강화 규제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 규제 FLOW 관리

- 현행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기능을 활성화하여, 신설 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평가(RIA)를 실질적으로 시행.

4. 성과 지향적 규제개혁 추진

- 달성하고자 하는 규제개혁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미리 설정하고 달성에 장애가 되는 모든 규제 및 다른 정책수단을 일괄 처리하는 방식. 기업 활동의 특정 애로 부문이나 민원행정에 이런 개혁방식이 유효할 수 있음.

5. 규제개혁 위원회 기능 강화

- 규제개혁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권능에 부합하도록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격을 높이고, 부처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지닐 수 있도록 체계 정비.